

##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 성 훈

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북한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2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핵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입장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북한 군부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총참모부 대변인이 남한 정부를 '역적패당'이라고 몰아붙이며 거칠게 비난한 것은 최고사령관 김정일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북한만의 일방적인 핵폐기는 100년이 가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① '조선반도 비핵화'의 목표는 남한과 주변지역에서 북한에 가해지는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청산하는 것이며 남한의 핵폐기 없이는 북한의 핵폐기도 불가능하고, ② 남한 전역에 대한 핵검증도 실시되어야 하며, ③ 핵무기를 보유한 당사자들 간의 핵군축이 실현되어야 한다.

총참모부의 기자회견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대남 공세의 일환으로서, 가깝게는 1월 13일자 외무성대변인의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핵군축' 담화, 1월 17일자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NLL 무력화 및 서해해상군사분계선 고수' 성명, 1월 30일자 조평통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남북한 합의 무효화' 선언에 뒤이은 대남 압박용이다. 더 나아가, 오바마 행정부에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중을 확실하게 전달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월 3일부터 불거진 대포동 미사일 발사 움직임도 전형적인 대미압박용 카드이다. 미국의 반응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북한은 금년 중에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2009년 공동사설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이란 문구가 등장한 것과 최근 왕자루이를 만난 김정일이 '6자회담의 진전을 희망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북한이 핵폐기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관측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년간 일관되게 견지되어 온 북한판 핵전략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오판이다. 우리에게 희망적으로 들리는 북한의 발언들은 북한정권의 일관된 핵전략의 틀 속에서 나오는 의도된 발언들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일성이 대외적으로 핵문제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1992년 2월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을 접견한 오찬이었다.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핵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견해를 밝혔다: ①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능력도 없고, ② 주변 강대국을 상대로 핵을 만들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③ 더욱이 민족을 말살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돌이켜 보건데, 김일성은 앞에서는 핵을 만들 생각이 없다며 우리를 안심시키고 뒤에서는 비밀리에 핵개발을 집요하게 진행했으며, 그의 아들 김정일이 핵실험을 완수함으로써 "대를 이어 충성한다"는 북한의 정치선전을 현실에 구현했다. 결국 북한의 핵전략은 핵개발 포기라는 가면을 쓰고 비밀 핵개발을 추진한 이중전략이었다. 1970년대 남북대화를 하면서 뒤에서는 남침용 땅굴을 팠던 북한을 상기한다면 핵전략의 이중적 실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지금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의미의 '비핵화'를 말하면서 동상이몽 중에 있다. 남한은 핵보유를 포기

하고 주한미군의 전술핵까지 철수한 상태이므로 북한의 핵무기만 폐기하면 비핵화가 달성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1990년대 초 남북기본합의서 협상 때 제기했던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이다. 당시 북한은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항공기·함선의 한반도 통과·착륙·방문 금지, 핵우산 보장조약 체결 금지, 핵무기 동원 군사훈련 금지 등을 요구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미 군사동맹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미군의 한반도 출입은 물론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군사훈련까지 금지되기 때문이다. 미군의 전술핵이 철수된 지금도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을 핵전쟁 연습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의 ‘한반도 비핵화’를 수용하여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한 것은 당시 동구 공산주의의 붕괴로 어려움에 처한 김일성이 정권의 활로를 남북대화에서 찾으려 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핵화 공동선언 체결 직후부터 북한은 비핵지대화의 내용을 다시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북한의 주장은 ‘비핵화’라는 모자를 쓰긴 했지만 그 내용은 ‘비핵지대화’였다.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다.

북한 정권의 주한미군 철수 의지는 집요하다. 핵이 없었던 1980년대까지는 재래식 전력 감축을 매개로 주한 미군과 핵 철수를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제 핵무기까지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당연히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하자고 나서는 것이다. 비핵화가 김일성의 유훈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핵을 매개로 외세를 배격하고 남북통일을 주도해서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 정권에게 있어서 비핵화는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북한의 계속된 ‘조선반도 비핵화’ 주장은 6자회담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북한이 이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한·미 양국은 6자회담에서 퇴장하는 수밖에 없다. 6자회담을 살리기 위해서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을 약화시키고 군사대비훈련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범정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 공세를 전개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차원의 확고한 대응은 거의 없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상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조용한 대응만 일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모인 6자회담 차원의 대응도 필요하다. ‘조선반도 비핵화’ 주장이 부당하고 근거 없는 궤변이라는 점에 대해서 북한을 제외한 5자가 합의해야 한다. 남한은 이미 완전히 비핵화 되었다는 사실을 한·미가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중·러·일의 동의를 받아내야 한다. 또한 미국정부가 나서서 한국은 투명하고 모범적인 비핵국가라는 점을 확인하고 보장함으로써,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일말의 의혹도 불식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북핵을 매개로 진행중인 6자회담이 동북아의 미래 판도를 선점하려는 4강의 각축장으로 변질되어 한국의 국익이 침해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조선반도 비핵화’ 주장을 분쇄하지 않은 채 6자회담을 진행시키는 것은 북한이 파놓은 수렁에 빠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